

대구신문

15대 총선때 이前시장 선거법위반 주임검사

주성영의원 행보 ‘관심집중’

한나라당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15대 총선(1996년)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당시 비서였던 김유찬 씨에게 거액을 주고 재판과정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(대구 동구갑)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주 의원은 이 전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주임검사(서울지

검 공안1부)였기에 누구보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그러나 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며 입을 다물고 있다.

주 의원은 대구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전 시장의 수사내용에 대해 “검찰청 문을 떠나면서 대부분의 사실은 잊어버렸다.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”고 말했고, 범인은 닉네임에 대해

선 “그 얘긴 하지 말자”고 대답했다.

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“이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잘 된 수사였다”고만 말했다.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“(위증교사가) 있었다면 기소 후 재판과정에 이뤄진 것이므로 말 할 수 없다”는 입장 을 보였다.

검사로서의 재직당시 알게 된 수사상 기밀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얘

2007년 02월 20일 003면

기다.

문제는 주 의원이 최근 동문간의 유대가 끈끈하기로 정평이 난 고려대 선후배 관계인 이 전 시장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당내 대권후보경선 라이벌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.

주 의원은 지난 12일 대구 동구청과의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동구출신의 대구시의원과 동구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“대구 국회의원 중 박 전 대표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. 박 전 대표가 현재 어려우므로 도와주는 것이 의리이다”면서 경북고 동기이며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유승민 의원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.

김상선기자 kss@idaegu.co.kr